

광주시-전남도, 복지·보건 통합체계 구축 시동

7월 특별시 출범 대비 정책 연계 강화...실무협의 본격 가동 지역별 수혜기준·행정절차 단계적 정비해 균형체계 구축 통합돌봄·의료서비스 '광주전남형 모델'...현장 의견수렴

광주시와 전남도가 오는 7월 전남광주 통합특별시 출범을 앞두고 시도민의 삶과 직결된 복지·보건 분야의 행정통합을 본격 추진한다.

시와 도는 23일 시청 소회의실에서 '복지·보건 분야 간담회'를 개최하고, 정책 연계와 실질적인 협력 기반 구축을 위한 첫 실무 협의를 진행했다. 이 자리는 행정

통합에 따른 제도적 차이를 면밀히 점검하고, 현장의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에서 양 시도 관계자들은 복지·보건·의료 분야의 주요 핵심사업 추진 현황을 공유하고, 각각 다른 지원 기준과 서비스 전달체계를 비교 분석했다.

양 시·도는 통합돌봄 체계 구축, 공공보

건의료 네트워크 강화, 감염병 공동 대응, 취약계층 지원체계 연계 등 동반상승효과를 낼 수 있는 사업을 중점 논의했다.

도 행정구역 통합 때 발생할 수 있는 제도 운영 방식의 차이도 사전에 조정해 주민들이 체감하는 서비스의 연속성을 확보하기로 했다.

시와 도는 단순한 행정 통합을 넘어 '거주지역에 상관없이 수준 높은 복지·보건 서비스를 누리는 균형체계 구축'을 목표로 삼고 있다.

이를 위해 지역별로 상이한 수혜 기준과 행정 절차를 단계적으로 정비하고, 통합돌봄과 공공의료의 중심지로 한 '광주·전남

형 협력 모델'을 완성할 계획이다.

이날 간담회를 시작으로 복지·보건·의료 분야별 실무협의의 정례화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행정공백을 사전에 차단하고, 통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즉각 반영할 예정이다.

박정환 시 복지건강국장은 "복지·보건·의료 분야는 주민 생활과 직결되는 핵심 영역"이라며 "양 시·도의 강점을 결합해 시민과 도민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통합 돌봄·의료 서비스를 구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양동민 기자 yang00@gwangnam.co.kr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광주시와 전남도는 23일 시청 소회의실에서 '복지·보건 분야 간담회'를 개최하고, 정책 연계와 실질적인 협력 기반 구축을 위한 첫 실무 협의를 진행했다.



이재명 대통령, 중앙통합방위회의 주재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59차 중앙통합방위회의를 주재하고 "국방은 누구에게도 밀려서는 안 되며 우리 스스로가 완벽하게 최종적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며 "자주국방이 가장 중요한 통합 방위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국제 정세가 매우 복잡하고 유동적이다. 이런 때일수록 국가 단위의 통합된 방위체계가 중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전남도, 생활안전 등 섬 정주여건 개선에 1353억원 투입

여수·완도·신안 등 10개 시군 102개 섬 대상 발전사업 추진 교통·복지·관광 인프라 확충...체류형 관광 기반 등도 강화

전남도가 올해 여수·완도·신안 등 10개 시군 102개 섬을 대상으로 1353억원 규모의 섬발전사업을 추진한다.

방파제와 물양장 같은 안전 인프라를 보강하고 교통·복지시설을 확충해 섬 주민의 생활 여건을 끌어올리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번 사업은 섬 주민의 정주환경을 개선하고 관광객 접근성을 높여 체류형 관광 기반을 넓히기 위해 마련됐다. 사업은 어업기반시설 확충, 교통 여건 개선, 지역 특성을 살린 소득사업, 문화·복지시설 조성 등 4개 축으로 추진된다.

우선 방파제 보강, 물양장 설치, 마을안길 개설 등 어업기반시설 정비가 이뤄진다. 섬 주민들의 이동 불편을 줄이기 위한 연륙·연도교 확충, 도선 건조, 여객선 대합실 신축 등 교통 인프라 개선 사업도 함께 진행된다.

섬별 특성을 반영한 소득사업도 포함됐다. 어류·해조류 가공 등 지역 자원을 활용한 사업을 통해 주민 소득 기반을 넓히고, 주민 심터와 복지회관, 커뮤니티센터 등 생활밀착형 문화·복지시설도 확충할 계획이다.

올해 신규사업으로는 여수 거문도 덕촌



여수 시도

특성화사업, 무안 탄도 응급헬기 착륙장 조성, 여수 동도·삼산면 여객선 접안시설 정비, 고흥 연흥도 해안경관도 정비, 신안 가거도 국토공립 트레킹길 정비 등이 추진된다. 생활 안전과 교통 편의, 관광 기반을 함께 손보는 사업들이다.

전남도는 단순한 시설 확충에 그치지 않고 섬마다 여건과 자원을 반영한 맞춤형 사업으로 주민 체감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정주여건 개선이 관광 활성화로 이어지고, 다시 지역경제 회복으로 연결되는 구조를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전남은 전국에서 가장 많은 섬발전사업 물량을 맡고 있다. 전남도의 제4차 섬종합발전사업 개발 대상 섬은 전국 371개 가운데 215개로 58%를 차지한다. 전체 사업비도 개발 기간 기준 7262억원으로, 전국 총사업비 1조4972억원의 49%에 달한다.

박대건 전남도 섬해양정책과장은 "이번 사업비 확보는 섬 주민 정주여건 개선과 섬의 미래까지 제고를 위한 기반"이라며 "현장 중심 정책과 시군 협력을 통해 섬 주민 삶의 질을 높이는 사업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형 사업으로 주민 체감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정주여건 개선이 관광 활성화로 이어지고, 다시 지역경제 회복으로 연결되는 구조를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전남은 전국에서 가장 많은 섬발전사업 물량을 맡고 있다. 전남도의 제4차 섬종합발전사업 개발 대상 섬은 전국 371개 가운데 215개로 58%를 차지한다. 전체 사업비도 개발 기간 기준 7262억원으로, 전국 총사업비 1조4972억원의 49%에 달한다.

박대건 전남도 섬해양정책과장은 "이번 사업비 확보는 섬 주민 정주여건 개선과 섬의 미래까지 제고를 위한 기반"이라며 "현장 중심 정책과 시군 협력을 통해 섬 주민 삶의 질을 높이는 사업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민주 광주 기초단체장 경선투표 오늘 시작 남·북구 예비경선...동·서·광산구 본격경선

6·3지방선거 더불어민주당 광주 5개 기초단체장(구청장) 후보자 선출을 위한 경선투표가 24일부터 진행된다.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경선은 선거구에 따라 남·북구의 '예비경선'과 동·서·광산구의 '본경선' 방식으로 나눠 실시된다고 23일 밝혔다.

남구(5인)와 북구(7인)는 본경선 진출 후보를 압축하기 위해 100% 권리당원선거인단 투표 방식으로 진행된다. 강제적 ARS투표는 24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7시까지 총 5차례에 걸쳐 실시하고, 첫날 투표에 참여하지 못한 선거구인단은 이날인 25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자발적 ARS투표로 투표를 할 수 있다.

예비경선 결과는 25일 오후 10시30분께 광주시당에서 발표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남구는 2명, 북구는 5명의

본경선 진출 후보가 확정된다. 본경선을 실시하는 동구, 서구, 광산구는 권리당원선거인단 투표 50%와 안심번호 선거인단(일반시민) 투표 50%를 합산하는 국민참여경선 방식으로 진행된다.

권리당원 선거인단 투표는 예비경선 지역과 동일하게 24일 강제적 ARS투표와 25일 자발적 ARS투표 방식으로 이틀간 실시된다. 이어 안심번호 선거인단 투표는 26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총 5회에 걸쳐 진행된다. 투표 결과는 26일 오후 11시30분께 광주시당에서 발표할 예정이다.

동·광산구 선거구는 1위 후보자가 과반(50%)을 득표하지 못할 경우 상위 2인을 대상으로 결선투표를 실시한다. 반면 서구는 2인 경선이어서 단일 승자가 가려지지 된다.

이선하 기자 goback@gwangnam.co.kr

민주 목포시장 경선 2파전...강성휘·이호균 확정 전남 5개 지역 경선 후보자는 24일 발표 예정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 공천관리위원회가 23일 6·3 전국동시지방선거 목포시장 경선 후보자로 강성휘·이호균 후보를 확정했다.

전남도당에 따르면 목포시장 후보 선출은 국민참여경선 방식으로 진행된다. 권리당원 투표 50%와 국민여론조사 50%를 반영해 본경선 후보를 가린다.

1차 투표에서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으면 상위 후보를 대상으로 결선투표를 실시한다. 일부 지역은 당원 100%로 예비경선을 먼저 치러 본경선 진출자를 압축한 뒤 국민참여경선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 예비경선 결과 본선 진출자 가운데 여성·청년·장애인 후보가 없을 경우, 해당 대상군 가운데 1순위 후보 1명을 본경선에 추가하는 방식도 적용된다.



강성휘 이호균

이번 경선 후보자 발표에 이의가 있는 후보는 재심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민주당 전남도당은 재심 결과를 반영한 뒤 이달 말부터 순차적으로 첫 경선에 들어갈 방침이다.

앞서 전남도당은 지난 20일 15개 지역, 21일에는 신안군수 경선 후보자를 각각 발표했다. 보성 등 5개 지역 경선 후보자는 24일 발표할 예정이다.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1면 '골목형상점가'서 계속

서구는 전국 최초로 전 지역 121개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완료하며 온누리상품권 사용 기반을 크게 넓혔다. 그 결과 상품권 사용액이 전년 대비 14배 이상 증가하고, 주민 생활비 절감 효과도 나타났다. 아울러 '골목경제119 상황판'과 전용 소통 창구를 운영해 정책 추진 상황을 상시 점검하며 현장 대응력을 높이고 있다. 이러한 노력은 행정안전부 혁신평가 9년 연속 우수기관 선정으로 이어졌다.

남구는 건부 공무원과 동 행정복지센터 직원들이 직접 상권을 조사해 추가 지정 가능 지역을 발굴하는 방식으로 성과를 냈다. 이를 통해 70여 곳의 신규 골목상권을 찾아냈으며, 상인들에게는 매출 증대와 공모사업 참여 기회, 소비자에게는 온누리상품권 할인 혜택을 적극 홍보했다. 북구는 골목형상점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맞춤형 마케팅 지원과 시장 매니저 운영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 관련 예산을 투입해 상권 활성화를 도모하고, 오는 10월에는 상인 교육과 컨설팅 기능을 갖춘 교육 거점도 개관할 예정이다.

광산구는 현장지원단을 통해 개별 점포를 직접 방문하며 제도 이해를 높이고, 골목상권의 자생력 확보에 집중하고 있다. 특히 '머뭇고 싶은 골목길 콘텐츠 개발·지원사업'을 통해 상인들이 직접 상권 특성에 맞는 활성화 방안을 기획·실행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선정된 상인단체에는 사업비와 함께 사전 컨설팅을 제공해 사업 완성도를 높일 방침이다.

이문범 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소상공인과장은 "골목형상점가 지정은 매출 확대와 가게 부담 완화를 두 가지 효과를 동시에 거두고 있다"며 "지정 확대에 그치지 않고 지역 실정에 맞는 정책으로 골목상권과 소상공인의 성장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내달 1일 무안서 광주 군 공항 이전 주민설명회

국방부, 이전절차·지원방안

광주 군 공항 이전 문제와 관련해 주민소통의 자리가 마련됐다.

전남도는 다음달 1일 오후 2시 무안군 승달문화예술회관에서 국방부 주관 '광주 군 공항 이전 관련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설명회는 군 공항 예비이전후보지 선정에 앞서 주민 궁금증 해소와 정확한 정보 제공을 위해 마련됐다.

설명회에선 △군 공항 이전사업 절차 △광주공항 국내선 이전 △이전주변지역 지원방안 △정부 차원 지원사업 등을 설명한다. 국방부와 관계기관이 주민 질의에 직접 답하는 질의응답도 진행된다. 전남도는 지난해 12월 17일 대통령실

주관 6자 협의체 합의 이후 정부와 광주 시, 무안군과 협의를 이어오며 주민 지원방안과 지역발전 방향을 구체화하고 있다. 특히 전남·광주 행정통합 이후에도 광주 민간·군 공항 통합이전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에 따른 특별법에 '군 공항 이전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특례' 조항을 반영했다.

이를 통해 무안 국가산단의 신속한 지정과 이전 주변 지역 지원을 위한 제도 기반을 마련했다.

전남도는 설명회를 계기로 지역사회와 소통을 강화하고, 주민 의견을 반영해 이전주변지역 지원사업이 안정적으로 진행되도록 정부와 협력할 방침이다. 또 지역 발전 지원방안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마련되도록 정부에 지속 건의할 계획이다.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전남 '살아보기' 25개 마을 확대 운영

도, 2~3개월 체류형 프로그램

전남도가 도시민의 농촌 정착을 유도하기 위한 체류형 프로그램 '전남에서 살아보기'를 올해 25개 마을에서 운영한다.

이 사업은 도시민이 2~3개월 농촌에 머물며 영농 활동과 일상생활을 직접 경험하고 주민과 교류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단순 체험을 넘어 실제 정착 가능성을 판단할 수 있도록 설계된 프로그램이다. 참가자에게는 농지와 주거 정보 제공,

귀농·귀촌 상담 등 정착 지원이 함께 제공된다. 체류 기간 동안 농업 현장 경험과 지역 공동체 활동을 병행하면서 생활 기반을 점검할 수 있도록 돕는다.

올해 운영 마을은 전남 17개 시군 25곳으로, 기존 운영 성과와 전이됨, 프로그램 구성, 전담 인력 확보, 숙소 환경 등을 기준으로 선정됐다.

각 마을은 지역 여건을 반영한 프로그램을 운영해 농촌 생활 전반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